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5년 5월 12일 월요일 제611호

지면안내 03 사회 빛소리를 뚫고 '노동'을 부르짖다 / 04 기획 끝없는 청구서, 수수료가 삼킨 배달 업계 / 06 학술 유연함으로 혁신의 깊이를 더하다 / 08 기획 가출 아닌 '탈출', 생존을 위한 선택

타운홀 미팅 개최, 장학·학사·복지 전반 논의

총장 “지속적인 소통으로 학생 지원 이어갈 것”

지난 30일 제3회 한성대학교 타운홀 미팅(이하 타운홀 미팅)이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렸다. 대학본부 관계자 12명과 학생대표 18명이 자리한 이번 행사에서는 학사 및 장학 부문과 생활 및 복지 부문 등 여러 안건이 논의됐다.

학사 및 장학 부문 안건

- 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개선 촉구
- 블렌디드 수업 축소 현황 확인 요구
- 주·야간 합반 문제 의견 표명 요청
- 전공필수 과목 수 확대 예정
- 트랙·학과(부) 변동 사항 안내 강화
- 졸업장 학위 명칭 선택권 보장 건의

총학생회(이하 총학) 측은 성적장학금 동점자 처리 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오예은(컴공 4) 부총학생회장은 “올해 한성성공 장학금 개편이 이뤄지며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취득학점이 많은 자 대신 소득분위가 우선 고려되고 있다”며 “해당 방침이 성적장학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삼혁 학생처장은 “해당 장학금은 학문 수행을 격려하려는 의도이기에 장학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한 블렌디드 수업 개선 및 축소 요구의 반영 현황 점검을 건의했다. 이영재(사회과학 3) 총학생회장은 “블렌디드 수업을 통한 온라인 강의 재사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블렌디드 수업 방식 축소 현황을 점검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용훈(학사지원팀) 팀장은 “블렌디드 수업의 장점이 분명하므로 품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며 “원격수업 운영 규정에 따라 수업만족도 조사에서 일정 점수 미만일 경우 온라인 강좌 개설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2학기 수업만족도 조사에서

수업 유형 적절성을 묻는 문항을 신설했다”며 “도출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블렌디드 수업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총학생회는 일부 전공과목에서 주·야간 합반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야간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학본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 회장은 “융합보안학과, AI융합학과 등 창의융합대학(이하 창의대) 소속 일부 전공과목이 주·야간 합반으로 운영되며 야간반 학생이 해당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야간반 개설 인원이 부족해 폐강되며 야간 학생들이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됐다”고 의견을 내세웠다. 박 팀장은 “사실관계 확인한 결과 해당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향후 실제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면 야간반 학생들이 주·야간 합반 수업을 수강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이하 사과대) 학생회는 전공필수과목의 과목 수를 증설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문정기(사회과학 2) 사과대 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졸업을 위해 전공필수 과목을 15학점, 즉 5과목을 이수해야 하지만 그 수가 부족해 추가 학기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 팀장은 “교육과정 편성 지침상 각 트랙은 5~7개의 전공필수 과목을 설정할 수 있다”며 “IT공과대학의 일부 트랙이 5개의 전공필수 과목이 개설된 바가 있어 추가 개설을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창의대 학생회는 기존 트랙·학과(부) 폐지 후 신설 시 학생들에게 사전 안내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을 건의했다. 김현진(문공 3) 창의대 학생회장은 “트랙·학과(부)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신·폐설되면서 학습권의 침해가 일어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주 기획조정처장은 “트랙·학과(부)를 변경이나 신·폐설할 경우 주임교수와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한다”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장, 주임교수, 학생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원 총장(좌), 이영재 총학생회장(우)

동일한 시간에 대해 IT공과대학(이하 공과대) 학생회는 졸업장에 트랙·학과(부) 표기 선택권 보장을 요청했다. 신성진(산공 3) 공과대 학생회장은 “2025학년도에 기계자동차 트랙이 AI융합로봇트랙으로 변경되면서 4학년은 졸업장 전공 학위명칭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3학년도 학업의 질만을 기준 트랙 수업을 수강했으므로 선택권을 부여해달라”고 역설했다. 박 팀장은 “해당 트랙은 전공 신설이 아니라 변경으로 학사 행정에 임력됐다”며 “4학년만 유예를 준 사항이며 현재로서는 번복하기 어렵지만 검토해 보겠다”고 부연했다.

생활 및 복지 부문 안건

- 스쿨버스 앱 혼잡도 표시 요청
- 본교 로고 디자인 공모전 개최 예정
- 학생자치기구 회의 시간 보장 불가

생활 및 복지 부문의 건의사항도 뒤를 이었다.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는 스쿨

버스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혼잡도 표기 기능 도입을 요청했다. 이근주(컴공 3) 부위원장장은 “카카오톡, 네이버 지도 등의 앱을 통해 마을버스의 혼잡도를 파악할 수 있지만 스쿨버스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해 혼잡도가 표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기호(정보보호) 팀장은 “스쿨버스의 혼잡도를 확인하기 위해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일정 부분 비용이 발생하는데 총무인사팀과 협의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학복위는 본교 로고 디자인 공모전 개최도 건의했다. 대학교의 로고는 학교의 정체성을 담아내야 하지만 본교의 로고가 이를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재민(산공 4) 위원장은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해 투표로 로고가 결정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현 글로벌협력처장은 “의견을 수렴해 공모전을 개최하겠다”며 “홈페이지 메인 화면 홍보 방법, 영상 등을 대상으

로 하며 5월 중으로 공고가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신설된 브랜딩 디자인연구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며 브랜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총대의원회는 학생자치기구의 정기회의 시간 보장을 요구했다. 이연준(컴공 4) 의장은 “트랙·학과(부), 단과대학, 중앙기구 등 학생자치기구의 회의가 지속해서 열리지만 수업, 행사 등의 일정으로 회의 시간이 확보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본교 중앙운영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수업 편성 단계에서 학생자치 시간이 존재했다”며 “이를 다시 도입한다면 학생 의견 수렴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팀장은 “해당 시간은 교수와 학생 간 상담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이 시간을 확보하면 오히려 일반 학생들의 수업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공결 처리를 통해 참여할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옥상 휴게 공원, 보수 및 철거 예정



▲비상문자동개폐장치로 인해 닫혀있는 창의관 옥상 휴게 공원 출입문

본교 옥상 휴게 공원(이하 옥상 공원)의 보수 및 철거가 이뤄질 계획이다. 옥상 공원은 「2023년 자체평가보고서」(이하 자체평가보고서)에 학생 편의복지시설(이하 편의시설)로 등재돼 있으나, 장기간 출입이 제한된 상태였다. 대학본부 측은 옥상 공원 이용률 저하와 방수공사를 위해 철거 및 보수가 결정됐으며, 학생 휴게공간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본교에는 총 6개의 옥상 공원이 조성돼 있다. ▲탐구관 ▲연구관 ▲공학관 ▲창의관의 옥상공원은 2007년 서울특별시가 추진한 ‘옥상정원 조성 사업’을 통해 설치됐다. 미래관과 상상관 옥상공원은 각각 2011년도와 2016년도에 조성됐다. 정도영(자산관리팀) 부팀장은 “당시 학생들을 위한 휴게 및 녹지공간이 부족해 옥상에 녹지공간을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본지에서 확인한 결과 미래관과 상상관의 옥상정원과 달리 ▲탐구관 ▲연구관 ▲공학관 ▲창의관의 옥상 공원 출입이 불가했다. 옥상 공원 출입문 옆에 위치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때문이다. 본래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낮 시간에는 개방이 가능했으나, 공학관 B동 옥상 공원에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면서 2022년도부터 이용이 제한됐다. 정 부팀장은 “재학생과 외부인의 잦은 유입 및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출입이 제한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옥상 공원은 자체평가보고서에 재학생 편의 시설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대학본부는 학생이 활용하지 못하는 편의 시설 오기입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팀장은 “자체평가보고서에 편의 시설로 기재된 부

분은 담당 부서에 전달해 정정하겠다”고 말했다.

옥상 공원은 이용률 감소 및 누수 문제로 인해 철거 및 개보수 될 예정이다. ▲탐구관 ▲연구관 ▲공학관 등의 옥상 공원이 철거됐으며, 동일한 이유로 창의관의 옥상 공원은 보수를 검토 중이다. 정 부팀장은 “미래관과 상상관의 노후 조경시설물의 보수를 위한 예산 확보를 논의해 보겠다”며 “건물 리모델링 시 학생들의 휴게공간 확보 및 환경개선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 :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비상문에 설치하는 개폐장치로서 외부 신호에 의해 자동적으로 개방시키는 장치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김혜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대학·대학원 학칙 개정, 학사 등 개정사항 존재

본부 “명확한 교육목표 갖고 학업 수행 기대”

지난달 11일 학칙이 일부 개정됐다. 『한성대학교 학칙』이 개정됨에 따라 ▲학과 신설 ▲학부 명칭 변경 ▲모집 단위 정원 조정 등이 이뤄졌다. 『대학원학칙』에서는 대학원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개정이 진행됐다. 최윤석(전략평가관리팀) 팀장은 “이번 학칙 개정을 통해 본교 재학생 모두가 명확한 교육목표를 갖고 학업을 수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성대학교 학칙』에서 글로벌인재학부가 ‘글로벌인재대학’으로 승격됐다. 올해 신설된 글로벌인재학부를 단과대학으로 격상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대학생활 지원, 취·창업, 학습역량 강화 등의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글로벌인재대학 승격 관련 사항은 2026학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글로벌인재대학 승격에 따라 산하 6개 학과도 신설됐다. 기존 글로벌인재학부 내에서 트랙으로 운영되던 ▲한국언어문화교육트랙 ▲글로벌비즈니스트랙 ▲영상엔터테인먼트트랙 ▲패션뷰티크리에이션트랙 ▲SW융합트랙 등이 학과 체제로 전환됐으며 ‘글로벌벤처창업학과’가 새롭게 설립됐다. 해당 학과는 글로벌창업가 양성을 위한 기업가 정신 및 경영전략 수립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전형근(글로벌인재학부 교학팀) 팀원은 “글로벌벤처창업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는 교과목 변경 없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래플러스대학의 미래인재학부는 ‘AI·소프트웨어학과’로 개편됐다. 기존 39학점 이수 체계에서 78학점 이수 체계로 전환됐으며 교육과정에는 객체지향프로그래밍, 클라우드컴퓨팅 등 총 14개의 교과목이 신설됐다. 불명확한 전공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전공 심화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취지다. 미래인재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장현주(미래인재학부) 교수는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융합 프로젝트 설계 등의 폭넓은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교과목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IT공과대학(이하 공대), 창의융합대학(이하 창의대) 소속 학과와 글로벌패션산업학부의 입학정원 조정도 이뤄졌다. 지난해 상상력인재학부 입학정원 확대에 따라, 당시 편제가 미완했던 창의대 소속 학과의 정원을 타 모집 단위에서 일시적으로 감축했다. 이를 2026학년도에 원상 복구하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증원됐던 창의대 소속 3개 특성화학과 문학문화콘텐츠학과(주) 정원 2명과 AI응용학과(주) 정원 2명, 융합보안학과 정원 1명이 줄어 총 5명이 감축됐다. 동시에 사회과학부(주) 정원 2명, 공대(주) 정원 2명, 글로벌패션산업학부(주) 정원 1명이 증원되며 감축된 정원 5명이 원복됐다.

『대학원학칙』에서는 입학 시기가 조정됐다. 『대학원학칙』 제5조에서 입학(편입학·재입학) 시기가 개강일 이전에서 개강

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변경됐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 지연으로 개강 이후에도 입국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미영(대학원 교학팀) 팀장은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이 늦어질 경우에는 보강수업을 통해 수업 결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입생 첫 학기 휴학 또한 가능해졌다. 신입생 첫 학기 휴학을 불허하는 『대학원학칙』 제19조 제5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신입생 첫 학기 휴학을 다른 학생의 입학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로 간주해 금지했다. 이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학생이 자퇴하거나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정 팀장은 “대학원생의 경우 대부분 직장인이고, 중년층이기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며 “이들에게 첫 학기 휴학 제한이 학업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에 학칙을 개정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동시에 일반대학원 비논문석사학위과정(이하 비논문과정)이 도입됐다. 『대학원학칙』 제13조가 개정되면서 직장을 주로 교육하는 특수대학원에서만 운영되던 비논문과정이 일반대학원에서도 운영된다. 비논문과정이란 학위 논문 대신 연구 실적이나 대체 교과목 이수 등 논문을 대체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해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다. 정 팀장은 “인공지능 등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의 경우 논문 작성보다 기술과

지식의 습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요구가 충족될 것”이라고 전했다.

비논문과정 도입에 따라 수업연한 및 학점 취득 요건도 개정됐다. 일반 석사과정의 기본 수업연한은 4학기로 유지되지만, 비논문과정은 5학기로 조정됐다. 비논문과정 이수자는 기존 최저이수학점 외에 일반대학원의 경우 12학점, 특수대학원의 경우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단, 비논문과정은 4학기 차부터 최대 6학기까지 추가로 수강할 수 있다.

『대학원학칙』 제36조 석·박사 통합 과정 중도 포기자의 석사학위 수여 요건에서 외국어 시험 합격 요건이 삭제됐다. 석·박사 통합 과정의 경우 석사와 박사의 과정을 통합하여 진행한다. 이에 따라 해당 과정 중도 포기자는 석사학위를 수여 받기 위해 수업연한 및 학점 취득 요건, 종합시험 등을 충족해야 한다. 정 팀장은 “자동 번역기 등 기술의 발달로 외국어 문헌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영어로 된 정보 수집이 충분히 가능해진 점이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또한 『대학원학칙』 제12조에서 대학원 교과목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석·박사 전체 공통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기존에는 전공별 특수성으로 인해 공통과목 개설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공통과목 개설이 가능해졌다. 정 팀장은 “최근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이 전공과 무관하게 모든 학문 분야에서 수

강이 필요하다 판단한 데 따른 개정”이라고 말했다.

『대학원학칙』 제52조에서 대학원의 독립채산제 운영 관련 조문이 정비됐다. 독립채산제는 대학원이나 학과가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수익과 지출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일부 특수대학원에 한해 적용됐지만 개정을 통해 일반대학원도 독립채산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정 팀장은 “독립채산제란 각 대학원 및 학과가 특성화 전략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라며 “일반대학원에도 특성화 전략이 필요한 학과 및 전공이 있다 판단해 제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는 대학원의 교육간접비*와 예산 집행 방식도 변경됐다. 『대학원학칙』 제53조가 개정됨에 따라 대학원의 교육간접비 부담률이 기존 35%에서 38%로 상향됐다. 이 중 입학금과 등록금 합계의 3%는 대학원 공통 운영 예산으로 별도 편성된다. 이는 노후화된 대학원 시설의 유지보수와 대학원생의 증가로 인한 시설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정 팀장은 “이번 예산 운영 조정을 통해 대학원생의 학사지원과 학습 여건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간접비 : 연구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징수 또는 지급되는 경비

김혜운 기자 purple.pea06@gmail.com

Lunch with the President, 학생들의 목소리를 담다

‘Lunch with the President’ 행사가 지난 8일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이는 재학생과 총장이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식사 ▲질의응답 ▲기념 촬영 및 기념품 제공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창원 총장, 장명희 교학부총장, 이상혁 학생처장을 포함한 대학본부 관계자 6명과 재학생 7명이 자리했다.

참석자들은 상상관 12층 ‘케이키친 한상’에서 오찬을 즐긴 후, 9층 대회의실에서 음료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이 총장에게 개개인의 진로 고민이나 학교 시설 및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학술정보관 여자 화장실 개보수를 요청하는 안건이 제기됐다. 임예은(컴공 4) 학생은 “학술정보관은 많은 재학생이 이용하는 장소로 편의시설 역시 보장돼야 하지만 화장실 문틈이 벌어져 있는 문제를 발견했다”며 “여자 화장실의 화변기나 벌어진 문틈의 개보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해당 의견을 수렴해 총무처를 거쳐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법&정책트랙 재학생을 위해 집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박주환(사회과학 2) 학생은 “법&정책트랙 소속 학생으로서 진로에 대한 고민

이 존재한다”며 “법&정책트랙에 대한 본교의 발전 방향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법&정책트랙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직에 대한 열망이 강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시반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공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명희 교학부총장은 “이번에 변호사 고시반을 신설해 해당 트랙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이하 AI)과 관련된 본교의 계획에 대해 묻기도 했다. 김윤지(AI응용 2) 학생은 “현재 중국의 AI분야가 크게 발전하고 있으나 본교에 관련 프로그램이 활성화돼

있지 않다”며 “공공 프로젝트나 단기 연수 등의 계획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이 총장은 “지난 3월 중국국가상현실산업 혁신플랫폼(CVRVT) 및 중국정보통신연구원(CAICT)과 협약을 맺은 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중국의 AI 분야 연수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동아리 지원 확대에 관한 건의사항도 이어졌다. 김예준(산공 4) 학생은 “외부 구장을 대여해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비용적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성북구 내 공간 대여에 관해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동아리 활동 지원금과

인센티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고 답했다.

그 외에 ▲효율적 시간 관리 방법 ▲진로 관련 교내 지원 ▲서·동양화 전과 요청과 관련한 요구사항이 뒤를 이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 이 총장은 “오늘 나눈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정책의 품질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김예준 학생은 “해당 행사를 통해 건의한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안 내받았다”며 “건의한 사항이 원활히 처리된다면 다시 참여해 고민을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대의원총회에서 재선거 단위 예산안 심의

지난 8일 '2025학년도 상반기 2차 정기 대의원총회(이하 총회)'가 열렸다. 총회에서는 재선거를 통해 당선된 학생자치기구의 상반기 예산안이 심의됐다.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이하 인문예술대)을 제외한 나머지 단과대학의 예산안이 재적 대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승인됐다. 이날 2025학년도 상반기 예산으로 총 2,382,430원이 인준됐다.

인문예술대 ‘혜움’의 예산안 총 634,770원은 부결됐다. 세부항목에는 ▲기존 상주 사업 유지 및 보수 ▲공BTI ▲카카오톡 채널 ▲계절별 플래이스티스트 프로그램 ▲사업 예비비 ▲일상 운영비 등이 포함됐다. 결과에 따라 총학생회비를 활용한 인문예술대의 모든 사업은 추진될 수 없다. 이연준(컴공 4) 총대의장은 “인문예술대의 사업 4개 중 기존 상주 사업 유지 및 보수 사업과 사업 예비비, 일상 운영비만 가결된 상황”이라며 “전체 사업의 과반 수 이상이 부결될 경우 해당 단위의 사업 집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예산안 전체가 기각된다”고 설명했다.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학생회 ‘하늘의



▲대의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팻말을 들고 있다.

상반기 예산은 총 1,058,750원으로 책정됐다. 예산은 ▲기말고사 간식사업 ▲사업 공모전 ▲사대체전 ▲대여사업 ▲행사 후 만족도 조사 ▲일상 운영비 ▲사업 예비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미래플러스대학 ‘W’ON(위온)이 총 1,323,680원을 인준 받았다. ▲단과대 MT ▲문화지원사업 ▲카카오톡 채널 오픈 기념 이벤트 ▲일상운영비 ▲사업 예비비 등

이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한편 총대의원회는 인문예술대 예산안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와의 논의를 거친 뒤 임시 대의원총회(이하 임시총회) 개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중운위와 협의를 통해 임시총회가 열릴 수 있으나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글로벌라운지 개관식 개최



사진 : 이승희 기자

글로벌라운지(이하 라운지) 개관식이 지난 30일 미래관 지하 1층에서 진행됐다. 개관식은 본교가 추진하는 글로벌 캠퍼스 조성 사업 추진 의의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이창원 총장과 장명희 교학부총장, 이상규 전 주 스위스 한 국대사, 정동은 전 외교부 국제관계대사 등 교내·외 인사가 참석했다. 라운지는 내·외국인 학생 간 다문화 교류를 위한 공간으로 원어민 교수와의 언어 수업,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에 활용된다. ▲오픈 라운지 ▲다목적 강의실 ▲세미나실 등

으로 구성돼 있다. 김양진(글로벌유희스센터) 센터장은 “오픈 라운지 이용은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다목적 강의실과 세미나실은 비교과 프로그램 및 상담 공간으로 운영 중”이라며 “현재는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의 개별 이용이 제한된다”고 전했다. 일본인 유학생 회장을 맡고 있는 이토카즈유키(사회과학 3) 학생은 “라운지 개관식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앞으로 글로벌 라운지를 애용할 것”이라고 표했다.

임지민 기자 seeshuron@naver.com

빛소리를 뚫고 ‘노동’을 부르짖는다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지난 1일 개최된 ‘2025 세계노동절대회(이하 노동절대회)’에서 폭우 사이로 울려 퍼진 구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의 조합원과 시민은 ‘노동조합법 개정’,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을 요구하며 노동권 신장을 촉구했다.

피땀으로 지킨 권리, 노동삼권

5월 1일 열리는 노동절대회는 135년에 이르는 역사를 지닌다. 자본주의가 비약적으로 팽창하던 19세기, 국가와 기업은 산업의 성장과 이윤 극대화에 몰두했다. 그 이면에서 노동자는 하루 14~18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며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자본은 노동자의 삶에 무관심했고 1890년,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외치며 집단적 투쟁에 나섰다.

당시의 투쟁은 조직적인 시위가 아닌 개인들의 자발적인 결집으로 이뤄졌다.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삼권이 법적으로 명문화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가 없는 비공식 집단은 제도 밖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사용자나 정부와의 공식적인 협상 주제로 인정받기도 어려웠다. 요구보다는 ‘호소’에 가깝게 여겨졌으며 정책이나 협상의 테이블에 반영되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개선되지 않는 노동자의 상황 속에서 노동자가 기업과 대등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담론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을 전후한 민주화 과정을 거쳐 ‘노동삼권’이 확대 수용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삼권을 통해 노동자가 노동조합(이하 노조)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으며 임금·근로조건 등에 대해 협상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또한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통해 집단적인 의사를 표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한다. 오늘날 노동삼권 보장과 노조 활동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며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한다.

노동권, 불법의 낙인이 찍히다

그럼에도 노동자의 권리가 뿌리내리지 못한 현실이다. 고용노동부가 1977년부터 3년마다 발표하는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에 따르면, 2023년 노조조직률은 13%에 불과하다. 2000년대 전체를 살펴보다도 14.2%가 최대치였다.

노동탄압 역시 우리 사회를 잠식하고 있다. 지난 2월, 법원은 1심에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강제통용교섭(이하 거통고) 조선휘정지회 조합원의 파업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임금 인상과 노조 활동 인정 등을 요구하며 51일간의 쟁의 행위를 벌인 바 있다. 파업 직후 사측은 조합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번 판결과 별개로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부르짖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는 노동자의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통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개인이나 노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는 노동삼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다.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통해 법적 지위를 갖는 노동자로 인정받고, 노조를 통해 실질적인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흠여졌던 숨들이 모여 만든 소리

이러한 노동 현실에 맞서, 노동자는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일 민주노총의 주최로 열린 노동절대회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됐다. 비가 쏟아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주최 측 추산 3만 명이 운집했다.

서울 송례문 인근에서 진행된 노동절대회는 사진전, OX퀴즈, 부대행사 등 사전 행사로 시작했다. 이후 본대회의 개회선언과 대회사, 각 노조대표들의 투쟁발언에 이어 퍼레이드 순으로 이뤄졌다. 사전대회는 시민들이 노동권과 인권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체험형 부스 형태로 구성됐다. 이겨레(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탄핵 과정을 거치며 광장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확인했다”며 “그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예년과 달리 사진전, 게임, 부스 등의 사전대회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정현철(직장갑질 119) 사무국장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겪을 때 맞설 수 있는 권리와 대응 방안 등을 알리기 위해 나왔다”며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자료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가 인쇄된 마우스패드 등의 상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본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선언에서 현재호(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본부) 부본부장은 “안전하지 못한 노동 환경과 불투명한 미래가 청년노동자들의 사람답게 살 권리를 빼앗고 있다”며 “청년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세월마련(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주노동자 역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세상을 바꾸기 위해 연대하겠다”고 천명했다. 김명흠(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조) 조합원은 “나는 민주노총 성소수자 조합원으로서 평등한 일터, 평등한 사회를 위해 노동절대회에 함께하겠다”고 부연했다. 이후 대회사에서 양영수(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이 노동자임을 확인받자”며 “성별이나 인종, 고용형태로 만연한 차별에 맞서 민주주의의 빛을 과감히 열어젖히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쟁발언을 위해 단상에 오른 최은실(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연맹 누구나노조지회) 운영위원은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도래하기 위해 사회대개혁이 이



사진: 이승희 기자

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우석(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의정부양주) 지대장은 건설노동자가 마주한 산업재해, 해고, 노조 탄압 등 열악한 노동 현실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어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도 피력했다.

마지막 순서로 노동절대회에 참여한 모든 노조의 퍼레이드가 진행됐다. ▲전국사무금융노조 ▲전국연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민주일반연맹 ▲전국금속노조 ▲전국건설노조와 각종 연대단체가 서울고용노동청 앞 거통고 고공농성장을 거쳐 광화문북광장으로 향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수노조 ▲전국대학노조 ▲전국여성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전국교직원노조 ▲전국화학산업식품산업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은 명동역 1번 출구 세종호텔 정리하고 고공농성장을 지나쳐 광화문북광장으로 합류했다.

이날 노동절대회에는 청년들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탄핵 정국 이후 청년층의 노동권 인식이 높아지면서, 개인 단위로 노동절대회를 즐기는 모습도 두드러졌다.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 고용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정부의 노조 탄압과 노동계 전반에 대한 압박이 모든 노동자에게 닥쳐올 수 있는 공동의 위기라는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서강대학교 철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조은재 학생은 “윤석열 정권 당시 건설노조 탄압, 양회동 열사 분신 투쟁 등을 보고 노동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리했다”고 밝혔다.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인 이은훈 학생은 “대학생의 경우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과 임금체불 등의 영향을 받는다”며 “이 역시 노동권과도 직결된 문제이므로 관심을 갖고 노동절대회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했다. 이미숙(전국불안정



사진: 이승희 기자

1 행진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

2 장애인의 이동권을 주장하는 노동절대회 참가자

노동절폐연대) 상임활동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강화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고용의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현실의 노동 조건을 개선시켜야 함을 피력하고자 참여했다”고 술회했다. 이어 “고용, 소득, 사회 보호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금번 노동절대회는 제21대 대선을 앞둔 행사였다. 윤석열 정부는 재임 기간 동안 노동권을 위축시키는 각종 정책을 펼쳐온 만큼, 노동권 신장의 갈길길에 선 시점이다. 새롭게 출범할 정부와 국회가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사진: 박석희 기자

끝없는 청구서, 수수료가 삼킨 배달 업계



'20대가 꼭 알아야 하는 경제 상식' '경제 초보를 위한 경제 개념 10분 요약' 인터넷에서 한 번쯤 봤을 법한 경제 관련 콘텐츠들이다. 대학생이 됐으면 경제개발 상식 정도는 쌓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관심을 가져보려 해도 까다로운 경제 용어가 발목을 잡기 일쑤다. 겨우 이해했다 하더라도 경제 뉴스 한 번 읽어볼까 하면 공부했던 기억이 휘발되곤 한다.

경제주체로서 현명하게 소비하고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은 필수적이다. 사회 전체의 경제 흐름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려면 경제 원리를 알아야 한다. 나아가 이를 사회 문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로 경제를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 배달비 2,000원. 큰 비용이 아니지만, 음식을 주문하는 순간 멈칫하게 되는 수수료다. 수수료는 개인이나 기업 간 거래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 등의 등장으로 수수료는 하나의 부가가치 창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배민의 수수료 부과로 인한 점주의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수수료는 본래 어떤 역할을 했으며 배민은 이를 통해 점주와 소비자에게 어떤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일까. 수수료 관련 경제 이론과 배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정책을 들여다보자.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수수료, 거래의 다리를 놓다

경제학에서 '거래(Trade)'는 시장에서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는 상품이 교환되는 모든 시장에서 이뤄지며 그 과정에서 교환의 기준이 되는 가격도 형성된다. 거래의 대상은 단순한 물건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노동, 자본, 토지 등 다양한 생산 요소가 상품으로 간주돼 교환된다. 주영찬(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거래는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 경제적 자원의 배분 과정 그 자체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거래는 경제활동에서 필수적으로 작용하며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데 기여한다. 가게, 기업, 정부 등의 경제주체는 각자의 수요와 공급, 자원의 희소성 등을 고려해 가격을 형성한다. 이 가격 설정 구조를 통해 자원은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분배된다. 즉 거래는 시장의 조정 기능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며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은 효율성 제고에 주력한다. 기업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 노력, 비용 등의 낭비 요소를 줄이고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 불이행 등 위험을 관리한다. 이는 곧 거래비용을 줄이려는 기업의 전략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조성준(전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거래의 효율성은 기본적으로 시장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기업은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거래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중개를 활용할 수 있다. 중개는 거래 당사자 간의 정보 탐색, 협상, 계약 이행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절차를 대행하거나 간소화함으로써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게 해준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들은 더욱 적은 비용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으며 위험 부담 또한 감소한다.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중개가 이뤄지면 그 대가로 '수수료(Fee)'가 지불된다. 수수료는 비용의 형태를 띠고 있어 비효율적인 추가 비용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다. 시장에서의 거래가 본질적으로 다양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정보 탐색, 협상, 계약 체결 및 이행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업이 독자적으로 부담하는 것보다, 제3자인 중개자가 일정 기능을 대신 수행함으로써 전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조 교수는 "기업의 목적이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것인데 수수료는 시장의 거래 비용을 줄여주는 가치를 지닌다"고 전했다.

수수료는 단순히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즉 거래 당사자의 특성에 맞춰 전략적으로 설정된다. 거래 당사자가 수수료 가격 변화에 민감할 경

우 중개자는 수수료를 낮춰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인하고, 가격 변화에 둔감한 거래 당사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중개라는 행위 자체도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되므로 수수료 역시 거래 당사자의 필요에 맞춰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설정해 소비자와 생산자 양쪽 모두에게 수수료를 분담시키는 '양면시장'이 확인된다. 이는 플랫폼의 등장과 확산에 의해서다. 양면시장은 서로 다른 이용자 집단이 존재하고 이들이 플랫폼을 매개로 상호작용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 구조를 뜻한다. 플랫폼은 거래의 중개자로서 각 집단에 차별적인 수수료 정책을 적용해 수익을 얻는다. 예컨대 소비자가 플랫폼을 통해 1만 원 어치 음식을 주문하면 플랫폼은 점주 등의 생산자에게 5천 원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는 1천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플랫폼이 설정한 차별적인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 집단은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불가피하게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된다. 네트워크 효과란 어떤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그 상품을 소비하는 다른 소비자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효과를 의미한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많을수록 거래 기회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므로 개별 이용자는 일정한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플랫폼을 떠날 수 없는 것이다.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강화시킬 경우 시장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플랫폼이 거래 당사자의 비용 부담이나 시장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설정하거나 인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개 본래의 목적이었던 거래비용 절감 기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비효율적인 비용 전가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 조 교수는 "네트워크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많은 거래 기회를 제공해 이득을 주지만,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통제하는 부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수수료로 인한 비효율적인 가격 구조와 자원 배분 왜곡의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해 플랫폼의 수수료 부과 방식을 관리하고자 한다. 일방적인 수수료 설정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주 교수는 "독과점 상황에서는 정부가 가격 상한제 등으로 시장에 개입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후생을 높일 수 있다"며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와 점주의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상생의 끈을 잇기 위해

지난 14일 국내 1위 배달 플랫폼 배민이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번 조치로 점주는 기존 중개수수료 최대 7.8%, 배달비 약 3천 원에 더해 포장 수수료 6.8%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끝없이 수수료를 늘리려는 배민의 행태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배민의 수수료 정책을 관리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배민이 점주에게 배달비, 중개수수료 등을 부과하는데 이어 광고 수수료의 압박도 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배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은 매장이 검색 화면 등에 노출되도록 광고 서비스를 운영한다. 기존에는 울트라콜이라는 광고 서비스를 통해 선택적으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홍보되는 형태였다. 그러나 지난달 해당 서비스가 폐지되며 모든 점주는 정률적인 광고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성훈(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프랜차이즈 경영학과) 교수는 "배민은 울트라콜 폐지로 점주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비용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점주의 각종 수수료가 한계에 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상황에서 점주는 소비자에게 수수료 부담액을 안내할 수도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수수료로 인해 상품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를 반영한 가격 정책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는 행위가 배민 앱에서 금지돼 있다. 상품의 가격도 높아지므로 수익 구조나 가격 정책을 설명하려 해도 배민 앱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다. 이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금지된 대리점의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배민의 수수료 정책과 관련해 실질적인 협의조차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수수료 논란이 거세지자 이를 조율하기 위해 지난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협의체의 회의를 보장하며 배달 플랫폼, 입점업체, 공익위원이 참가한다. 이들의 회의를 통해 발표된 상생안에는 전체 입점업체 중 절반의 배달비를 인상하는 등의 본래 의도와는 다른 내용이 포함됐다. 김진우(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상생협의체가 12차례에 걸쳐 논의를 이어갔으나, 7월경 배민이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하기도 했다"며 "상생안 역시 자영업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배민의 수수료 압박 문제는 플랫폼을 활용하는 기업에 수수료 규제를 적용하지 않은 점에 기인한다. 이는 플랫폼 산업에 제재를 가할 경우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식생

할 부문에 있어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시장 가격을 왜곡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김 공동의장은 "배민과 같은 독과점 기업이 시장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앱 이용을 유도하려는 배민의 정책이 수수료 부담액 표기 불가의 원인이 된다. 소비자가 해당 앱을 이용할 경우 점주는 배민의 수수료 정책에 의해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수수료는 소비자, 점주, 기업 등의 이해당사자의 활동을 바탕으로 그 가격이 결정돼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한해 독점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생협의체에 점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는 점주가 배민과의 충분한 협상 권한을 갖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다. 상생협의체는 플랫폼과 입점 점주 간의 상생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 구성에서 플랫폼 측이 해관계자가 중심이 되거나 발언권이 크기 때문에 점주 측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운 것이다. 김 공동의장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실질적인 논의를 주도했으나 제12차 회의에서 배달 플랫폼은 사전 예고 없이 무리한 합의안을 통과시키려 했고 두 단체가 퇴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배민과 같은 플랫폼 기업에 수수료 상한선을 규정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이하 온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온플법은 플랫폼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막으며 수수료 부과에 일정 부분 제한을 걸고 있다. 신용카드, 공인중개사 등의 수수료가 『여성신문금융업법』에 차감 조정 대상이 되는 만큼 플랫폼에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 공동의장은 "온플법을 제정해 배달업 수수료 한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거래의 당사자인 소비자가 수수료 구조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왜곡 없는 가격 형성과 공정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더욱 보장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상생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점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도 나타난다. 지난해 회의 이후 현재 상생협의체 활동은 중단된 상태다.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재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상생협의체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로 자율적 통제와 사회적 책임 준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 안의 돌봄, 집 밖의 권리

〈편집자주〉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해당 사업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가사사용인'이라는 지위를 부여해 가사 및 육아 노동에 투입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해당 사업 공개 이후,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한 저비용 인력 확보 수단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가사사용인이라는 지위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주요 노동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가사사용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부분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과 관련된 제도적 보호는 미비하다. 법의 보호 밖에 놓인 외국인 가사사용인의 상황과 이를 타개할 지원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지난 3월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와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고,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됐다. 가사사용인으로 고용된 ▲외국인 유학생(이하 유학생) ▲졸업 유학생 ▲결혼이민자 가족 등은 서비스 이용 가정에 투입돼 근무하게 된다.

가사사용인은 '가사근로자'와 큰 차이를 보인다. 가사근로자는 정부의 인정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이에 반해 가사사용인은 이용자와 사적계약을 맺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남표(하라 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사용인만 가사근로자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가사사용인 중 가사근로자의 비율은 1~2%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유학생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학생의 근무 시간이 제한돼 있는 점을 노려 취업 시간 확대를 내건 것이다. 근무 시간이 주중 10시간에서 최대 35시간으로 늘어나며, 최대 2곳에서 3곳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또한 비자 체류 기간을 연장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봉사활동 점수를 제공한다. 최영미(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정부는 해당 사업이 최저임금 미적용이라는 점이 알려진 이상 자발적으로 참여할 유학생이 없을 것이라 판단해

인센티브를 준비했다"며 "유학생이 가사·돌봄 노동을 수행하며 겪는 업무 부담에 비해 혜택이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업 시행을 위해 정부는 해외의 저출생 극복 제도를 차용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 대만은 1990년대 여성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국가들은 수요자가 민간 중개기관의 알선을 거쳐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한다. 이때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가사사용인과 유사한 형태다. 윤자영(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 가정에서 일정 시간 아이를 돌봐주고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숙식과 소정의 급여를 받는 '오피어'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앞선 사례를 차용한 시범사업 또한 외국인 가사사용인에게 이용자가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외국인 가사사용인은 피해를 제대로 신고할 수 없는 구조에 놓인다. 양승엽(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취업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가사·육아 분야에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인력을 부리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인권 및 사생활 침해에 당하는 문제도 나타난다. 가사사용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인권 침해 수준의 사적 폭력이 가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열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중개업체

가 통금 시간을 정해놓고 추석 기간 외에는 외박도 금지시키는 등 신체적 통제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하은성(셋별 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외국인 가사사용인은 인권 침해에 손쉽게 놓인다"며 "이러한 문제가 반복된다면 이들에 대해 '통제당해도 되는 노동자'라는 인식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 침해가 만연한 실정임에도 외국인 가사사용인이 마땅히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한 '서울시 외국인노동자 지원기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외국인 가사사용인은 가사근로자와 같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부당한 상황에 처해져도 피해 요청이 불가능하다. 양 부연구위원은 "언어가 서툴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외국인 가사사용인은 권리 구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가사사용인과 이용자 사이의 계약 알선 회사인 '이지태스크'의 법적 자격 부재도 가사사용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등록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지태스크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아닌 구인·구직 정보 등을 제공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다. 따라서 단순히 직업 정보만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온 이지태스크는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계약 알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다. 양 부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추진하는 직업알선 사업에 '무자격 업체'가 등장하는 것은 『직업안정법』이 오래전부터 규정한 기본 정신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사사용인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이 임금 지불 근거 부재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노동 환경에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없다는 의미다. 윤 교수는 "외국인 가사사용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이들이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가사사용인의 근무 환경에 대한 근로감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 가사사용인의 인권 침해도 발생한다. 가사노동이 이뤄지는 가정은 사적 공간으로 분류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로감독을 통해 여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이뤄지지 않아 외국인 가사사용인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설명이다. 최 위원장은 "가정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비인권적 행태는 드러나기 어렵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집단적 대응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외국인 가사사용인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고 기관이 부재해 이들의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가사사용인의 사적 계약,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한 기구는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국인 근로자를 위한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가 존재하는 것과는 상반된 실정이다. 윤 교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외국인 가사사용인을 위한 지원 기관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시민 단체들이 계속해서 기관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외국인 가사사용인들은 계약 중단에 따른 송환의 두려움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업체 선정 근거가 부실했던 점이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서울시는 이지태스크가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의 계약 체결 기술이 뛰어나고, 계약대로 업무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 판단해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직업안정법』 제47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이지태스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한다. 최 위원장은 "이는 『직업안정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불법 행위를 한 이지태스크와 서울시 담당자에게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가사사용인에게

근로 관련 법령이 적용되게끔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동법 제11조에 따르면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난다. 이에 외국인 가사사용인에게 노동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 노무사는 "이번 사업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서울시가 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우회한 것"이라며 "우회로를 통한 고용형태가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에서 외국인 가사사용인의 근무 환경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일종의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를 통해 가사사용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조직이 설문 등을 시행하면 사생활 침해 없이도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양 부연구위원은 "은폐되기 쉬운 환경에 놓인 외국인 가사사용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기적인 감독을 시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가사사용인이 피해를 당했을 때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이를 통해 권리 구제가 어려운 외국인 가사사용인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다. 최 위원장은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혹은 외국인상담지원센터와 같은 전문적이고 공정한 기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자격을 갖춘 업체만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책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와 사업 참여 업체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 노무사는 "유료직업소개사업 자격을 갖춘 업체만을 사업의 선정 대상으로 삼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가사사용인에 대한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이들을 단순히 집안의 허드렛일을 담당하는 '식모'로 취급하는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다. 최 위원장은 "가정 내 돌봄 노동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돌봄노동 전체의 지위가 하락할 것"이라며 "이는 내·외국인 노동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두가 연대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 사람이나 알바몬과 같이 구인자와 구직자 간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사업

| 가사근로자 · 가사사용인 비교 | | |
|------------------|-----------------------------------|---------------------------------|
| | 가사근로자 | 가사사용인 |
| 법적 지위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적용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미적용 |
| 근로계약 체결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 국내 양육 가정 간 직접적인 사적 계약 체결 |
| 보호 범위 |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연차 휴가 및 유급휴일 보장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 법령 미적용 |
| 임금 지불 근거 | 최저임금 적용 | 최저임금 미적용 |

유연함으로 혁신의 깊이를 더하다

(편집자주)

지난 13일 애플이 내년부터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폴더블 제품에 경쟁사인 삼성의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채택하겠다고 밝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국내 기술이 품질 검증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애플의 기준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우리는 이미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에는 여전히 의문이 든다. 화면이 접히는데도 꺼지지 않고 그대로 빛을 내는 건 어떤 기술 덕분일까. 그리고 기업들은 왜 이토록 접는 기술에 사활을 거는 걸까.

일상 속으로 성큼 다가온 이 기술에 대해 이해해야 앞으로의 기술 발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테다. 이에 본지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구조와 핵심 기술, 그리고 전망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핵심은 접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곡률(Curvature)'을 원활하게 구현해야 한다. 곡률은 화면이 얼마나 부드럽고 자유롭게 휘어질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물리적 지표다. 수많은 개폐 동작을 반복하면서도 화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소재의 유연성과 내구성 사이에서 정밀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

곡률을 자유롭게 조절하기 위해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접고 펼 때 물체가 받는 힘, 즉 '응력(Stress)'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응력은 물체의 외부에서 힘이 가해질 때 물체 내부에서 이를 버티려는 저항력으로, '압축응력'과 '인장응력' 등으로 나뉜다. 압축응력은 물체를 누를 때, 인장응력은 잡아당길 때 발생한다. 서민철(경희대학교 미래정보디스플레이학부) 교수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응력이 특정 부위에 집중되지 않도록 물성, 위치, 두께 등의 구조가 세밀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화면을 구성하는 다층 구조를 가능한 한 얇게 적층시키는 설계를 채택한다. 화면은 주로 ▲커버 윈도우 ▲터치 센서 ▲OLED ▲박막 트랜지스터(TFT) 등으로 구성된다. 각 층을 얇게 설계하면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힘을 효과적으로 약화시키고 내부 응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 여러 장의 종이를 겹쳐 접는 것보다 한 장의 종이를 접는 것이 더 쉬운 것과 같은 원리다.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응력을 이겨내기 위해 '초박형 유리(Ultra Thin Glass)'를 사용한다. 초박형 유리는 두께가 약 100마이크로미터로 매우 얇으면서도, 쉽게 파손되지 않는 특수 강화 유리다. 얇기, 강도, 유연성 등의 특성이 폴더블 화면을 구성하는 데 적합하다. 이에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가장 바깥쪽에 위치해 화면을 보호하는 커버 윈도우로 활용된다.

초박형 유리는 이온 교환 공정을 통해 우수한 유연성과 강도를 얻는다. 이온 교환은 고체물질 속에 있는 이온이 전해질 수용액과 접촉할 때 서로 자리를 바꾸는 현상이다. 전해질 수용액은 이온 교환을 위해 전류가 흐르는 수용액이다. 일반적인 유리는 주로 소듐 이온(Na+)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칼륨 이온(K+)이 풍부한 용액에 담그면 유리 표면의 소듐 이온이 칼륨 이온과 교환된다. 송장근(성균관대학교 디스플레이특성화대학원 첨단디스플레이공학과) 교수는 "유리제질인 UTG는 표면이 매끄럽고 스크래치에 강해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활용하기에 우수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이온 반경의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이온 반경은 이온의 가장 바깥쪽 전자껍질과 원자핵 사이의 평균 거리로 이온의 크기를 말한다. 반경이 큰 이온은 표면에서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결과적으

로 유리 표면에는 팽창이 일어난다. 권장혁(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회장은 "칼륨 이온은 소듐 이온에 비해 비교적 큰 크기를 갖고 있다"며 "이온 교환이 이뤄지며 유리 구조가 국소적으로 팽창한다"고 부연했다.

구조적인 팽창은 내부에 압축응력을 유도하게 되며 물질의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하려 한다. 이 응력은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균열이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억제하는 장벽 역할을 한다. 칼륨 이온이 소듐 이온보다 이온 반경이 크기 때문에 유리 표면에 자리 잡으면 해당 부위가 팽창하고 이로 인해 내부 압축응력이 형성되는 방식이다. 권 회장은 "결국 물체의 안정적인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이온 교환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또 다른 핵심 소재로는, 화면의 빛을 발광시키는 'OLED(Organic Light-Emitting Diode)'가 있다.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 기존의 평탄한 스마트폰 화면인 LCD의 구조를 이해해야 할 테다. LCD는 ▲유리 ▲컬러필터 ▲액정 ▲편광판 ▲백라이트 등 복잡한 층을 가졌다. LCD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없어 화면 하단에 위치한 백라이트가 흰색 빛을 쏜다. 이 빛은 먼저 편광판을 통과한 뒤, 전기 신호에 따라 배열이 조절된 액정 층을 지나게 된다. 스마트폰을 켜면 화면에 이미지가 표시되도록 전기 신호가 디스플레이 패널에 전달되는 형태다. 액정은 구현하려는 이미지에 따라 빛의 투과량을 정밀하게 조절한다. 이후 빛이 적색(R), 녹색(G), 청색(B)으로 분리된 컬러 필터를 통과하면서 각각의 화소에 대응하는 색상을 표현한다. 이 과정을 거쳐 수많은 픽셀이 모이면 화면에 원하는 색상의 이미지가 구현되는 것이다.

반면 OLED는 유리 기판 위에 형성된 자체 발광 소자로 더욱 단순한 층을 형성한다. OLED는 픽셀 단위로 적색, 녹색, 청색 각각의 소자가 배치돼 스스로 빛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이에 OLED는 LCD의 컬러필터부터 백라이트까지의 구조를 단일층으로 압축시켜 효과적인 적층구조를 갖는다. 문천우(순천향대학교 디스플레이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적층구조는 디스플레이의 여러 구조에서 활용됐으나 OLED는 소자를 활용해 두께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고 역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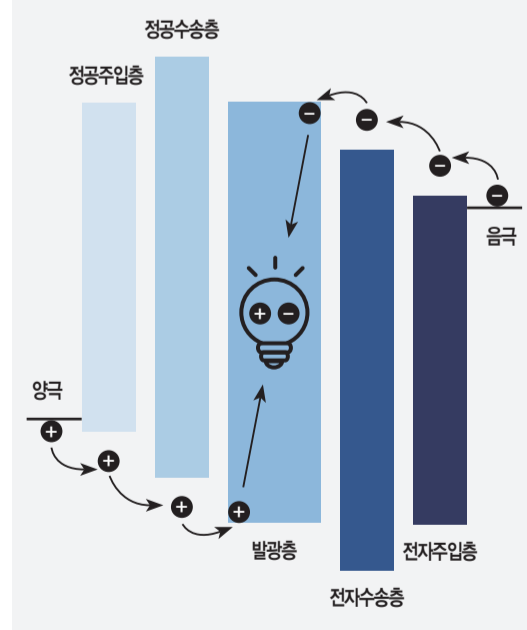
OLED 소자는 전류를 공급받아 빛을 방출하는 반도체 구조를 지닌다. 반도체 내부에는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전자와 전자가 빠져나가 생긴 양전하 성격을 띠는 정공*이 존재한다. 전류가 흐르면 전자와 정공은 각각 음극과 양극 방향으로 이동하고, OLED의 중심에 위치한 발광층에서 이들이 만나게 된다. 송 교수는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인 전도대와 정공이 이동하는 통로인 가전자대를 이동하다가 발광층에서 만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발광층에서 만난 두 입자는 서로 반대 전하를 띠므로 전기적으로 끌려 하나의 결합 쌍을 형성한다. 이 결합 쌍은 높은 에너지 값을 가지며 불안정한 성질을 지닌다. 이에 더 안정된 상태로 전이하려는 특징을 보인다. 결합 쌍이 전이되는 과정에서 결합 쌍이 소멸하면서 남는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 방출 에너지가 바로 가시광선 형태의 빛으로 전환돼 디스플레이 화면의 색상을 구현하는 방식이다. 서 교수는 "OLED의 유기층은 유기반도체로 전자와 정공이 만나 쌍을 이루고, 이것이



사진 : 박선희 기자

OLED 구조



재결합되면서 에너지 차이만큼 빛을 낸다"고 전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화면의 여러 층을 원활하게 결합하기 위해 '점착제' 또한 활용했다. 점착제는 약한 힘으로도 표면에 부착되며, 반복적인 접착과 분리가 가능한 재료를 뜻한다. 본드 등의 점착제를 사용한다면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화면이 제대로 접히지 않거나 각 층이 파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재료를 유연하게 고정하기 위해 점착제는 분자 간 전기적 인력에 기반한다. 모든 재료의 분자는 전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 전자가 다른 재료와 접촉하면 두 재료 표면의 분자 사이에서 전자가 약간 이동하며 전자가 물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 전기적 인력이 발생하고 인접한 분자 표면 사이에서 작용해 점착력을 유

지시킨다. 우리가 흔히 겪는 정전기 현상과 유사하다. 문 교수는 "반데르발스 힘이라고 부르는 분자 간 인력으로 인해 폴더블 디스플레이 재료를 부착시킬 수 있다"며 "이 인력은 표면적이 클수록 효과가 강화된다"고 부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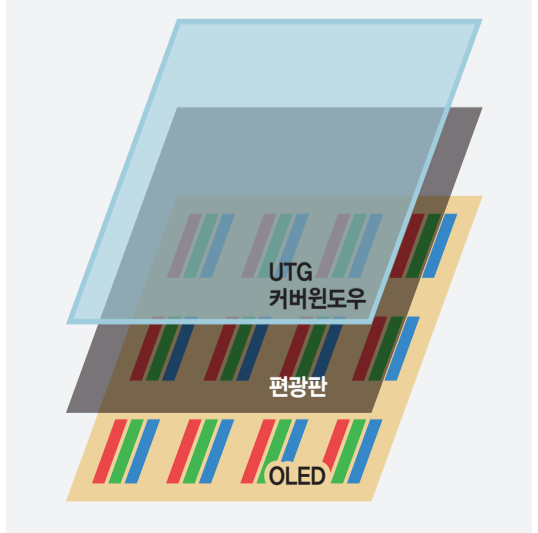
점착제는 단순히 층과 층을 붙이는 역할을 넘어서, 화면을 접고 펼칠 때 발생하는 압축응력이나 인장응력을 완화하는 완충제 역할도 수행한다. 특히 폴더블 디스플레이처럼 반복적인 물리적 변형이 일어나는 구조에서는 이러한 응력 분산 기능이 화면의 내구성과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현재(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는 "점착제는 압축·인장응력을 흡수하면서도 층간 분리를 방지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애플의 폴더블 디스플레이 출시 예고는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주류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는 신호로 더욱 다양한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단순히 접히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사용자의 동작과 상황에 맞춰 화면이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권 회장은 "두 번 접는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향후 새로운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확대는 폴더블 기술 경쟁도가 속화될 전망이다. 폴더블 관련 기술은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미국이 이에 가세하며 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각국의 각축전이 치열할 것이라는 의미다. 김 교수는 "각국은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전략기술 자산으로 보고, 소재·부품·장비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공: 전자가 결합을 깨고 전도 전자가 될 때 비어 있는 자리로 새로운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전자의 구멍

폴더블 디스플레이 구조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사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삼 학 송 ·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성이 되려면

지난 겨울 등록금이 동결된 후 한 학기가 지나고 있다. 타 대학에서 줄줄이 등록금을 인상했지만, 본교는 대외에 합류하지 않고 수도권 4년제 사립대학 중 첫 번째로 등록금을 동결했다. 물가 상승 속 재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타운홀 미팅에서도 이창원 총장은 “금년 학교와 학생 간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등록금을 동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등록금 동결이라는 번듯한 포장지 속 내용물은 그다 좋아보이지 않는다.

대학이 등록금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등록금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2년 본교의 등록금 의존율은 63.3%였다. 본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고, '2023학년도 대학 자체평가보고서'에서 등록금 의존율 경감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 등록금 의존율은 59.6%로 경감했지만, 이는 50%에 가까운 의존율을 보이는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국인 재학생의 등록금을 동결한 대신,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은 상당 부분 인상을 받았다. 지난 1월 진행된 2025년 제1차 등록금심의 위원회에서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7% 인상이 결정됐다. 『고등교육법』 제11조

에서 각 학교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4.3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외국인인 인상을 제한 폭은 부재하다. 외국인 유학생이 이 사실을 알 방도가 있을까.

본교는 글로벌인재학부를 글로벌인재대학으로 승격시키고, 잉글리쉬 라운지를 글로벌 라운지로 재탄생시켰다. 이는 본교가 '세계로 뻗어 나가는 한성, 한성으로 모여드는 세계'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상당 부분 인상해놓은 후 외국인 유학생 수를 늘려 수입을 올리려는 속셈으로 보일 여지가 다분하다.

'2025년 수도권 4년제 사립대학 1호 등록금 동결'이라는 타이틀도 물론 중요하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성을 위한 길목에서, 내국인 재학생 등록금 동결이 큰 의미가 있을까. 외국인 유학생도 구성원이다. 등록금 인상의 흐름에서 등록금을 동결해 대내외적 관심을 받는 것도 좋지만, 진정 등록금 동결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본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도약하길 바란다면, 외국인 유학생의 경제적 부담 역시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김유성 편집국장

박기자의 시선

유심 교체 예약 안내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신 고객님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미 유심 교체를 예약하신 고객님이 많이 계셔서 즉각적인 유심 교체가 어렵습니다.

현재는 매장과 예약 사이트를 통해서만 교체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 접수 후 방문 확정 문자를 받으신 날짜에 매장에 방문해주시면 한 분, 한 분 고객님께 최선을 다해 응대해드리겠습니다.



통과된 심사, 실종된 보안

지난 19일 SK텔레콤 가입자의 유심 관련 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됐다. 사고 발생 수개월 전 SK텔레콤은 정부로부터 3개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 및 갱신했다. 3번의 정부 심사를 통과하고서도 결국 해킹을 막지 못한 셈이다.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 신고한 정보 관련 피해 건수도 지난해 96건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정부는 과연 무엇을 심사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인증심사가 부실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어쩌면 예견된 결과였다. 정부가 디지털 세계의 무단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인증심사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기자수첩

주4일제, 환상이 아닌 현실이 되려면

'주4일제'. 휴일이 늘어나는 꿈만 같은 단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이하 대선)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주4일제와 주4.5일제를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주4일제는 평일 하루를 추가 휴일로 지정하는 방식이며, 주4.5일제는 근무 시간을 조정해 하루를 더 쉬거나 퇴근을 앞당기는 제도다. 휴일이 늘어난다는 점은 누구에게나 달콤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 대선 후보자들도 이를 의식한 듯 관련 공약을 꺼내들었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 과제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연차조차 온전히 소진하기 어려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들의 평균 연차 일수는 13.0일이지만 이중 4.3일

은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서는 연차 사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상급자 및 동료의 눈치'를 꼽은 비율이 40.3%에 달했다.

쉬는 것조차 눈치를 보며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 누군가 자리를 비우면 그 공백은 자연스레 남은 이들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일이 멈추지 않는 환경에서, 한 사람의 휴식은 곧 누군가의 부담으로 전환된다.

이는 휴식권이 박탈된 문제가 아니다. 일상에 대한 통제권, 즉 '시간 주권'의 부재를 보여준다. 시간 주권은 노동자가 자신의 시간을 얼마나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를 말한다. 쉬 수 있는지의 여부마저 타인의 기준과 조직의 구조에 좌우되는 형태다. 시간 주권이 조직에 종속된 상황에선 제도적 휴일이 늘어난다 한들 그것이 실제 삶의 여

유로 이어지진 어려워 보인다.

주4일제가 현실화되려면, 그 밑바탕부터 다져야 한다. 시간 주권을 실현해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기반 형성이 필요하다. 대체 인력 확보, 업무 분담 재설계, 휴식권 보장을 위한 변화도 요구된다. 나아가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제도 밖에 놓인 이들의 시간권도 함께 고려돼야 할 테다.

시간은 금이라는 말은 익숙하다. 그러나 노동자의 시간은 여전히 자기 것이 아니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스스로의 시간을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하루 더 쉬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이 아닌,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공약이 등장하길 바란다.

김혜윤 기자 purple.pea06@gmail.com

낙산만평

이승희 기자 sun2sideup03@naver.com



낙산에 올라

이른 아침 6시.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로 직행한다. 간단히 샤워를 마치고 옷장에서 교복을 꺼내 입는다. 이후 바로 집을 나선다. 학교에 도착해서는 아무도 도착하지 않은 텅 빈 교실에서 지습을 시작한다. 그렇게 지나간 하루를 책상 앞에서 보내고 학원을 나온 시각은 밤 10시. 이제 집에 가서 밀린 숙제를 해야 한다. 숙제를 다 끝내니 시간은 새벽 2시. 겨우 씻고 졸린 눈을 붙이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하루다. 주목할 점은 언제부터가 이 기괴한 모습이 대한민국에서는 '평범한' 것이 됐다는 것이다.

도박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교육열이 치열하기로 소문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곳에서는 요즘 초등 의대 교실이 유행이란다. 한창 잘 먹고 뛰어놀아야 할 나이인데, 이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 대신 학원으로 향한다. 우리는 과연 이 모습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일반적인 어린이의 일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것이 일반적인 것이 돼가고 있다. 그러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 참 기괴하다. 아이들에게 '시간의 개념이란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하나' 생각하는 것이 아닌, 공부하기엔 항상 부족한 것이 돼버렸다. 항상 남들에 비하면 늦었다는 압박감이

그들을 압도한다.

본격적으로 대입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연령이 이제는 초등학교생까지로 내려왔다. 더욱 심한 경우에는 어쩌면 미취학 아동 때부터일 지도 모른다. 이제 아이들은 유년 시절의 전부를 대학을 위해 사용한다. 나중에 성년이 돼 떠올릴 어릴 때의 즐거운 추억들도 하나둘씩 사라져 간다. 그리고 인생의 전부가 대학이 되는 순간, 나중에 좋지 못한 결과를 얻는다면 아이가 살아온 인생의 시간 전체가 부정당하는 셈이 될 것이다. 그때 가서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할까? 학창 시절의 전부를 대학 입시에 거는 것이, 너무 위험한 도박은 아닐까?

유수민(인문 2)

의화정

AI/SW 교육, '글로벌-산학-기술창업'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산업계는 단순히 이론에 능한 인재를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 역량과 융합적 사고를 갖춘 실무형 인재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AI·SW 분야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산학 프로젝트', '산학 연계 프로젝트', '기술 창업 지원'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고 국내외 현장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교육 모델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SW학과(컴퓨터공학부, AI응용학과, 융합보안학과) 중심의 산학 연계 커리큘럼은 ARCS 이론(관심-관련성-자신감-만족감)을 기반으로 몰입형 학습을 설계해,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성취감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첫째, 글로벌 산학 프로젝트는 AI·SW 인재들이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창업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싱가포르, 실리콘밸리, 일본 등 IT 선진국의 기업 및 대학과 연계한 연수 프로그램은 현지 실무 프로젝트 참여와 창업 문화 체험, 인턴십 등의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둘째, 산학 연계 프로젝트(캡스톤 디자인)는 산업계와 교육 현장을 직접 연결하는 실습형 수업으로, 학생들이 실제 기업 과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며, 결과물을 제작하는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 산학 협력의 결과물은 출원·특허, 해외 저널 논문, 국내외 학회 발표 등으로 이어지며, 학생 개개인의 포트폴리오로서도 큰 가치를 지닌다.

셋째, 기술 창업 지원 체계 역시 눈에 띈다. AI·SW 기반의 창업 교과목부터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제작, 투자 연계까지 전 주기 창업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캠퍼스 내 활발하게 운영되는 기술 창업 동아리, 해커톤 등은 학생들의 도전정신과 실행력을 고취시킨다.

한성대학교 SW중심대학 사업단은 단순한 코딩 인재 양성에 그치지 않고, 이론과 실무, 교육과 산업, 국내외 글로벌을 잇는 융합형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앞으로는 학생 개개인의 포트폴리오 구축과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성취감을 동시에 만족시켜 AI·SW 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할 것이다.

오세종(AI응용학과) 교수

기자사령

임수습기자 조수윤(인문 1) 퇴수습기자 이한비(인문 1)

동정란

김동철(시응용학과) 교수
김 교수는 한국경제에 「회장님도 사용하는 인공지능, 칼럼을 게재했다.

김민수(컴퓨터공학부) 교수
김 교수는 지난 4월 벤처창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가출 아닌 '탈출', 생존을 위한 선택

(편집자주)

오는 19일은 성년의 날이다. 많은 청년이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지만, 성년으로의 진입이 두려운 청년도 있다. '탈가정 청년'도 그중 하나다. 탈가정 청년은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원가정과 물리적·정서적·경제적 단절을 선택해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말한다. 이들은 사회적 지지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삶의 무게를 마주한다.

탈가정 청년은 가정 내 폭력과 학대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을 떠났지만, 또 다른 고통을 마주한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세상으로 나온 이들은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이 불안과 빈곤 속에 내몰린다. 일상적인 생계와 주거 문제조차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현실은 이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들의 울타리가 돼야 할 국가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 채 외면당하고 만다.

그들은 왜 가정 밖으로 나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또한 가정 안팎으로 위기에 처한 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본지는 현재 탈가정 청년이 놓여있는 상황과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당 기사를 송고한다.

박석희 기자 sukhee121@naver.com



'탈(脫)가정 청년', 가정 내 폭력, 방임, 경제적 착취, 학대 등의 이유로 원가정과 물리적·경제적·정서적 단절을 선언한 청년을 일컫는 말이다. 이들의 탈가정은 단순히 반항심에 의한 가출이 아닌 '불가피한 탈출'이다. 가정이 더이상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 됐을 때 생존을 위해 집을 떠난다는 의미다. 김선기(신촌문화정책연구원) 연구원은 "가정으로부터의 탈출은 가정폭력, 가정불화, 경제적 착취 등의 위기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탈가정 청년의 탈가정은 청년의 독립과 큰 차이를 보인다. 독립은 오랜 기간에 걸쳐 사회적 기반을 닦아 원가정과 분리되는 데 비해 탈가정은 일련의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실행된다. 또한 독립의 경우 원가정과 분리가 돼 있을 뿐 언제든 연결이 가능하지만, 탈가정은 원가정과 단절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김 연구원은 "원가정과 단절을 포함하지 않는 독립과 달리 탈가정은 원가정과 단절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원가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다. 282복스의 '제도이탈: 청년 독립 선언 탈가정 청년 사례집'에 따르면 '탈가정을 선택한 주된 이유'에는 ▲정서적 학대 ▲가정폭력 ▲방임 ▲아웃팅* 등이 존재했다.

탈가정 이후 탈가정 청년은 대체로 취약한 생활 환경에 놓인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나 보호 체계 없이 홀로 삶을 꾸려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윤여원(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탈가정 청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불분명, 신분증 미소지, 건강보험 미가입 등의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고 밝혔다.

탈가정을 했음에도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탈가정 청년'도 있다. 원가정과 단절을 유지하는 탈가정 청년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원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탈가정 청년도 존재한다는 뜻이다. 강미선(주식회사 282복스) 대표는 "경제적 상황, 신변의 위협, 부모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는 등의 이유로 탈가정 청년은 원가정으로 복귀하게 된다"고 전했다.

탈가정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이들은 사회에서 충분히 이해받기 어려운 현실에 놓인다. 가족 중심의 사고가 뿌리 깊게 박혀있는 사회에서 부모와의 단절을 선택한 청년을 충동적으로 가출한 청년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강 대표는 "탈가정 청년이 겪는 불화와 탈가정 이후 발생하는 문제가 안타깝게도 대중은 '아무리 그래도 부모인데'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탈가정 청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들을 정의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탈가정 청년을 돕고 싶어도 정의가 부재해 이들을 제대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탈가정 청년은 공식적인 법적 지위나 정책적 보호 기반이 없어, 정부 정책의 행정상 존재하지 않는 청년'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조차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로의 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주거·생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 속에서 안정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여건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봉착한다. 윤 교수는 "탈가정 청년은 일용직이나 불법 다단계 등 비공식 노동시장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장기적인 저소득 상태와 노동 착취로의 유입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탈가정 청년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기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아닌 '가구'를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는 구조다. 그 결과, 법적 기준상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산정된다. 탈가정 청년이 실제로 독립해 생활하고 있더라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박강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가정 청년은 현재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원가정으로 돌아간 탈가정 청년이 심각한 위험에 빠지기도 한다. 탈가정 청년의 입장에서 원가정으로의 복귀는 폭력과 구타가 만연한 환경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은 재범률이 높을 뿐더러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다. 강 대표는 "원가정이 가정폭력의 가해자이기 때문에 탈가정 청년은 원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큰 위험에 처한다"고 꼬집었다.

탈가정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없는 점이 정의 부재의 원인으로 꼽힌다. 고립·은둔 청년, 쉬엠팀 청년 등의 집단은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탈가정 청년은 이 같은 실태조사가 전무하다. 박 의원은 "엄연히 존재하는 정책 대상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정부의 소극행정으로 탈가정 청년 관련 의제가 발굴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탈가정 청년에게 있어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취업연계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탈가정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이다. 윤 교수는 "탈가정 청년은 자립정보, 취업훈련, 취업연계교육 등 기초적인 교육 자원에 대한 접근 자체가 구조적으로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만 30살 미만의 미혼 청년은 수급 대상으로 인정받지 않는 점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해당 제도는 개인의 소득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가족 전체를 수급 대상으로 묶어 선정하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가구 소득만으로 정책 수혜자를 선별할 때 탈가정 청년의 상황은 고려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가정폭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별도로 기초생활수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

해야 한다. 자신이 폭력 피해를 상담했다는 상담 사실 확인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탈가정 청년이 이를 용이하게 입증하도록 마련된 제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피해 입증과 같은 어려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정폭력 가해자인 원가정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족한 점이 탈가정 청년이 원가정으로 복귀했을 때의 위험성을 더욱 증폭시킨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이 일부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상담 종료 후 지속적인 사후관찰 등의 조치는 부재하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발생 가정의 96.7%가 사후 관리 서비스 제공을 원한다고 밝혔다.

탈가정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를 통해 전국의 탈가정 청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다. 강 대표는 "실태조사를 통해 탈가정 청년의 규모와 현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의제 설정과 정책 요구를 위한 귀중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탈가정 청년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도울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해결책이 거론된다. 취업 교육 시행 및 교육비 제공 등과 같이 탈가정 청년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취업연계교육과 같이 탈가정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민간 기업 또는 시민단체 등과 협업해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원가정 중심의 지원 제도에서 탈피해 부모와 독립적으로 탈가정 청년이 지원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가구 소득만으로 정책적 지원을 펼치는 것에서 벗어나 개별적인 소득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연구원은 "추가적인 선별 기준 도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개인 소득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대안은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 등의 신청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한다.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폭력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이러한 제도가 있다면 효과적으로 증명 및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강 대표는 "단순히 기초생활수급 신청자의 설명에 의함 아닌 가정폭력 상담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 결과 등을 통해 행정적 단절을 증명해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통해 탈가정 청년이 원가정으로 복귀했을 때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대책도 제시된다. 상담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방문 조사 등을 통해 가정환경을 점검해야 한다는 해결책이 논의된다. 김도영(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정폭력 피해자인 탈가정 청년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원가정 모두를 위한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전했다.

결국 전문가들은 탈가정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들은 단순히 '가출 청년'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탈가정 청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며 "이들 또한 고립·은둔 청년이나 자립준비청년처럼 국가에서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깨닫게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웃팅: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이 다른 사람에 의해 강제로 밝혀지는 일